회장님, 위원장님, 경제공부 좀 합시다.

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잘 안될까요?

대기업은 좋은 부품회사가 있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는 안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기를 열심히 지원해서 세계최고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느 날 부품회사가 변심해서 부품값을 2, 3배로 올리거나 경쟁기업과 손을 잡아 부품공급을 안하겠다면 어떡하나? 속수무책일 수 있다. 대기업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중기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해서 내몸과 같게 만들고 싶어한다. 그럼 자연히 이익을 공유하고 계열사로서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자도 100%지분소유는 아니지만 대기업과 공동운명체가되어 경영안정을 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부품회사지분을 30%이상만 소유하면 계열사로 취급하여 계열사대주주라고 중기업자까지 포함 사돈의 팔촌까지 규제를 받는다. 그뿐인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하여 계열사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무슨 악덕 경영인것처럼 규제감독하니 어느 대기업이 부품회사에 열심히 기술을 전수하고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열심히 가르쳐 주고 나중에 뺨을 맞느니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편할 수밖에.... 여기다 정부도 200여개가 넘는 중기육성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같이 못하는 중기는 더 대접받고 잘하는 중기를 역차별하는 1/n 지원정책으로 성장의욕을 꺾어왔으니 부품자본재산업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 30여년간 부품자본재중기 육성해서 수출가득율 올린다고 온갖 노력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수출의 외화가득율이 1980년 63.2%에서 1995년 69.8%로 정점을 치고 2000년 63%, 2007년 53%로 30년 전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대통령 만날 때 마다 열심히 동반성장 노력하겠다 하지만 결국 인센티브구조가 안 맞으니 항상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중기들은 잘하나 못하다 다 꼭 같이 지원받으니 잘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길은 더 막히는 것이다.

현실 시장에서 기업간의 시장거래는 기업내의 거래에 비해 항상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된다. 시장거래는 모든 거래조건에 대해 쌍방간에 100%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는 합의를 이루기위한 지루한 협상과정(돈과 시간을 포함)이 필요하고 집행을 담보하기위한 법적인 장치와 그 운용에 따른 비용도 소요되는데 이런 모든 불편함과 비용을 일컬어 거래비용이라 한다. 일부대기업들의 중기기술탈취나 납품가부당인하행위를 정부가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법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때문에 지재권제도나 공정거래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내 거래는 모든 결정이 협상없이 사장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거래보다 효율적인 것이다. 기업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할 위험이 있는 부품회사를 묶어두기 위해서는 각종의 높은 거래비용이 든다. 이익을 공유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서 묶어두고 싶지만 계약조건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서로 합의하기가 어렵고 계약이 성사되도 집행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부품회사를 계열화하여 내부조직화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된다

고 판단하는 것이다. 회사내에서는 쉽게 초과이익공유가 제도화될 수 있지만 독립기업간에 이런 현상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좋은 뜻이라고 밀어붙이면 부작용과 왜곡은 뻔한 결과이다. 대기업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중기는 계속 어렵고.. 더 나아가 대기업들이 불편해서 해외로 탈출하면 좋은 일자리는 해외로 나간다. 청년일자리는 공염불이 된다.

세상에 완벽한 해법은 없다. 단지 불완전하더라도 세상이치에 맞게 하면 된다. 대기업과 부품회사간 공정한 바탕위에서 자본공유나 인수합병이 일어나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공정위가 잘 감시하고, 부품회사들간에도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중기지원정책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로 바꿔 독립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혁신적 중기들은 더 빨리 성장해서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비용을 높여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이나 중소기업의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책은 그 명분이 어떠하든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좌승희.